



의안번호

제163호

##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11. 16.

#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163호
----------	-------

제출연월일 : 2020. 11. 1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가.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2조부터 제4조)

- 시민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종사해야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함.

나. 필수업종 선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안 제 5조부터 제7조)

- 필수업종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자 함.

다.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8조부터 제13조)

-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일부반영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1항에 ‘성별 특성’을 추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통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여 이를 반영함

- 조례안 제9조(위원회 구성) 제4항에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대표’를 포함하도록 개선 권고되었으나,

논산시 필수업종은 조례 제정 후 최초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 되기 때문에 최초 위원회 구성 당시 필수업종은 미지정 상태 이므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대표를 특정할 수 없으며, 조례안 제9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필수업종 선정 후, 필요시 추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대표를 위촉할 수 있기에 미반영 함

3) 규제심사 : 규제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년 10월15일~11월4일(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041-635-2243)

##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호

###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일선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동반하여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업종 지정일자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제공
2.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호의 재난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의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2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부시장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사 회 적 경 제 과 장	김 민 영
	사 회 적 경 제 팀 장	김 민 자
	담 당 자	이 건 욱 ( 7 4 6 - 6 0 1 7 )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세출: 제13조(수당 등)

## 2. 비용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논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을 대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 추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평가수당 포함)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함.

### 나. 추계결과

- 세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참석위원에 지원되는 시비
- 세출

#### 1. 참석수당

$$=100,000\text{원} \times 6\text{명} \times 3\text{회}=1,800\text{천원}$$

#### 2. 관내 업종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조사 연구용역비

$$=10,000,000\text{원} \times 1\text{회}=10,000\text{천원}$$

#### 3. 필수노동자 긴급 물품 지원

$$=50,000\text{원} \times 200\text{명} \times 2\text{회} =20,000\text{천원}$$

## 3. 작성자

사회적경제과장 김 민 영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31,800	21,800	21,800	21,800	21,800	119,000
시 비		31,800	21,800	21,800	21,800	21,800	119,000
세 출		31,800	21,800	21,800	21,800	21,800	119,000
1. 참석 수당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2. 연구용역비		10,000					10,000
3. 긴급 물품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31,800	21,800	21,800	21,800	21,800	11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1,800	21,800	21,800	21,800	21,800	119,000
	지방세	31,800	21,800	21,800	21,800	21,800	119,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참고2

## 필수노동자 정의에 관한 해외 사례

-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 보호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 의료, 돌봄, 물류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 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분야의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 이후] 전체 산업 체계가 변화할 경향이 보이나요? [경향신문]<sup>1)</sup>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

- ❖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센셜 임플로이(essential-employees)**, 영국에서는 **키워커(key-worker)**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야말로 모두가 생존하는 데 기본이 되는 필수 노동을 한다는 점요. 의료진, 음식 파는 가게 직원, 배달 노동자, 양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저임금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록다운 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 보니 투자는행가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들 없으면 못 살 겠구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해요.
- ❖ 이 위기가 끝나고 이들 분야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 이런 필수노동이 멈춰지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 내팽개쳐진 '돌봄' ... 굶주린 소년은 그렇게 떠나려했다. [서울신문]<sup>2)</sup>

- 가족 외면·코로나로 지역 돌봄도 공백, 빈집서 3개월간 겨우 물만 먹고 지내

- ❖ 충남 예산의 한 중학생이 '배를 굶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 확인됐다. 아이는 방학에 이어 코로나19로 개학이 지연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 방치된 채 3개월간 물 외의 음식 물을 거의 먹지 못했다.
- ❖ 예산가정상담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도 못 가고 가족도 없고 방문 상담사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A군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은 지역 돌봄 사업 아동으로 선정돼 주 1회 지역 활동가의 돌봄을 받았으나 코로나19 탓에 2개월 정도 방문이 중단됐다.

- 주요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노동자 범위	
캐나다	<b>주정부에서 지정한 필수 직군에 종사,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해당주 거주)</b> ※ 의료·사회적 서비스, 민간 돌봄 서비스, 음식점(드라이브 스루, 테이크아웃), 배달 한정, 청소, 건물 유지관리, 교통, 물류 종사자 등
미국	<b>필수노동자 지원법안에서 지정한 34개 분야 소속 노동자</b> ※ 경찰, 소방, 응급의료, 공중보건, 요양관리사, 건강관리사, 약국, 배달, 드라이브 스루 음식점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대중교통 서비스 종사자, 선거관련(여론조사) 종사자, 세탁소, 우편배달부, 장례관련 종사자, 숙박업(객차장소 활용) 종사자 등
일본	<b>보건분야, 교육 및 보육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8개 분야 소속 노동자</b> ※ 의사, 간호사, 의약품공급자, 보육교사, 교사, 사법공무원, 종교인, 기자, 사회복지공무원, 식료품 및 주요 위생·의약품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종사자, 경찰, 군인, 교도소, 항공, 철도, 육상대중교통 종사자, 은행원, 상하수도 관리, 우편 종사자 등

1) 코로나19 이후 문명변화!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 (경향신문, 20.5.7.)

2) 내팽개쳐진 '돌봄'... 굶주린 소년은 그렇게 떠나려했다. (서울신문, 20.6.11.)